

KBA WEEKLY BRIEFING

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

2023.01.09 - 01.13

VOL.343

CONTENTS

I

EU TRADE POLICY

- ▶ 12.09 EU 집행위, '의료장비규정(MDR)'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유예 법안 채택
- ▶ 12.09 유럽의회 및 산업계, 'EU 데이터법'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
- ▶ 12.10 유럽특허청(EPO),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...한국은 초기 단계
- ▶ 12.10 EU-영국,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...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
- ▶ 12.11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, IRA법 대응한 EU '청정기술법' 도입 추진
- ▶ 12.11 EU, 메티버스,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
- ▶ 12.12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
- ▶ 12.12 유럽의회 경제통화委,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
- ▶ 12.13 말레이시아, '삼림 공급망실사법'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
- ▶ 12.13 TSMC,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

II

EU 환경규제 뉴스 – KIST EUROPE 제공

- ▶ 12.13 ECHA, 코발트 화합물 작업노출기준(OEL) 제안
- ▶ 12.13 P&G, '벤젠'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
- ▶ 12.13 EUON, '나노물질의 분해성, 잔류성 및 안전 설계'에 관한 보고서 발표

① EU 집행위, '의료장비규정(MDR)'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유예 법안 채택

● EU 집행위는 6일(금) 2017년 '의료장비규정(MDR)'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

- 2017년 발효한 MDR 규정은 20년간 적용된 의료장비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적용되기 시작, 약 50만 종의 의료장비에 대해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의무를 부여
- 2021년 5월 MDR 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, 인증기관 업무처리 역량 한계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재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
- 이미 작년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지연 사태가 예견된 바 있으며, 지난 4월 유럽의회도 약 2만 종에 달하는 의료장비 기술인증이 MDR 규정에 따른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,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
- 이에 집행위는 재인증 지연에 따른 역내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, 장비 종류에 따라 재인증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
- 유예 기간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△페이스메이커, 힙 임플란트 등 고위험 장비는 2027년 12월, △실린지, 재사용 외과 수술장비 등 중저 위험 장비는 2028년 12월, △제3형(Class 3) 주문제작 임플란트 장비 등은 2026년 5월까지 재인증 완료 기간이 연장됨
- 기존 지침에 근거해 획득한 인증으로 역내 시장에 시판매되는 의료장비의 판매 종료 시기도 연장되며, 2021년 5월 26일 이전 부여된 지침에 근거 획득한 인증의 유효기간도 연장
- 한편, 이번 집행위의 MDR 규정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연장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

② 유럽의회 및 산업계, 'EU 데이터법'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

- ### ●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'유럽 데이터법(EU Data Act)'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
-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, 작년 2월 'EU 데이터법'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
-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'공공위기 대응,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' 등의 목적과 함께 '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'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
 - 다만,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'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'는 내용을 추가
 -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,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
 - 또한,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(BusinessEurope)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요구로 발전할 가능성에 우려
 - 특히,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법원 영장에 의한 법집행보다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정부에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
 - 비즈니스유럽은 데이터법 규정상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'공적 기관'이 '지방 및 지역 정부와 기관 및 EU 기관' 등으로 정의된 점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리스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
 - 법안이 정보 공유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유된 정보의 처리, 삭제 및 필요 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
 - 디지털유럽(DigitalEurope)은 EU 회원국별로 법치주의 해석에 여전히 간극이 드러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다른바 '공공의 이해'에 관한 정의의 오남용 소지를 지적
 - 다만,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바르셀로나의 실시간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전염병 전파 상황을 파악한 경험에 근거, 광범위한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강조
 - 특히 통신사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거주자, 통근자 및 관광객 이동 등의 현황을 파악,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도입에 긍정적 의견도 제시
 - 한편, 유럽의회는 3월경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, 작년 회원국 간 이견으로 3차례에 걸친 데이터법 문안을 변경한 바 있는 EU 이사회는 금기 스웨덴 의장국 중재하에 조만간 데이터법과 관련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
- ③ 유럽특허청(EPO),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..한국은 초기 단계
-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,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

* 수소는 연소 시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 평가. EU는 2020년 'EU 수소전략'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~14% 총당을 목표.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됨

- 유럽특허청(EPO)은 10일(화) 발표한 보고서에서, 2011~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%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(이 가운데 독일은 11%, 프랑스는 6%를 차지)
-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%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,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
-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, 해당 기간 중 20%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. 다만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따른 수소 생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제특허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반면, 중국과 한국은 수소 분야 국제특허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,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각각 15.2%, 12.2% 증가한 점이 주목

● 유럽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시장 개발 및 주도권 획득의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, EU와 각 회원국의 규제가 수소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

- EPO 관계자는 일본이 가정용 수소 사용을 적극 지원한 시기에 수소 관련 국제특허가 급증한 반면 해당 지원이 중단된 후 특허도 감소한 사례를 지적, 수소 분야 연구개발 및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EU는 친환경 투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'친환경 수소'의 정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을 도과한 상태이며,
-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1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'EU 수소 및 친환경 가스 시장 패키지 (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s Package)'를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

● 한편, 유럽은 화학적 전기분해 및 수소 생산과 관련,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

- 유럽은 3가지 수소 생산 방식* 가운데 최신 기술인 SOEC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, 특히, 프랑스의 '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(CEA)'가 SOEC 기술 관련 국제특허 60개를 보유, 전 세계 SOEC 기술을 주도. CEA는 PEM 기술 관련 국제특허도 18개를 보유
- * 알칼라인 수전해,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(PEM), 고체산화물 수전해(SOEC) 등
- 다만, 유럽이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기술 상용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며, 이에 첨단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

④ EU-영국,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...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

-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→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,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
 -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(월)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, 영국 본섬-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,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
 -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
 -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,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
-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,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일시장 규제에 복속하며,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 구분을 위해 영국 본섬→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시행키로 규정
 -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(DUP)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을 분리하는 것으로 헌법적 완결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발,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북아일랜드 연합정부 구성을 거부
 -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연합당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자당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광범위한 통관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부 구성에 대한 반대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

⑤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, IRA법 대응한 EU '청정기술법' 도입 추진

- 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'청정기술법(Clean Tech Act)' 도입을 추진
 -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, 폴란드,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,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*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
 - *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
 - 특히,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'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(IPCEI)'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

-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
-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(수)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,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일부 집행위원들*을 설득한다는 계획
 - * 작년 12월 베스타가 경쟁당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. 다만, IRA법 대응과 관련한 맥락의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한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
-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EU의 IRA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으로, 이번 집행위원단회의에서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청정기술법을 포함한 관련 논의에 집중될 전망
- 이미 EU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 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, 집행위도 현재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지급 유연화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월 말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
- 한편, 금기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의 라르스 달니엘손 주EU 대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, IRA법에 대한 적절한 영향평가 수행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

⑥ EU, 메타버스,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

-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
 -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*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,
 - * 공정분담의 개념은 '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(sender-pays principle)'에 근거,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
 - 메타버스,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,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
 -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,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
-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, 2022년 말 이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

- 이에 대해 독일, 네덜란드 등이 이니셔티브 제안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니셔티브 제안도 연기된 상태
 - 수차례의 연기 후 집행위는 금주 후반 이니셔티브 관련 공개 의견청취를 개시, '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을 포함, 통신산업의 미래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
 - 또한, 집행위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을 검토, 오는 5월 3일 관련한 (비 입법적)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
- 한편, 컨텐츠 사업자 등은 통신망 사업자의 이중 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, 시민사회단체도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따른 '망 중립성'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
- 이와 관련, 작년 10월 '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(BEREC)'도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

⑦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

-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'역외보조금 규정'이 12일(목) 발효,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
-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,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
 - 규정에 따르면,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%,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%의 과징금이 부과되며,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,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
 -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, 기한,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,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
 -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 를 개시할 수 있으며,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됨

⑧ 유럽의회 경제통화委,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

-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(ECOM)*는 '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'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
* 유럽의회 법무위원회(JURI)가 주관 위원회이며, 경제통화위원회(ECON), 외교위원회(AFET), 국제통상위원회(INTA),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(ENVI), 고용사회위원회(EMPL)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- EU의 이른바 '공급망실사지침'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
-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,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(trilogue)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
-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,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'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.5억 유로 이상인 기업'으로 적시
 - 이는 '종업원 수 1,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이사회 입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인 반면,
 - '종업원 수 500명 이상 또는 글로벌 순 매출 1.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장하는 의회 일부 정파 주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
 - 특히, 초안은 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, 금융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각 회원국 선택에 맡긴 EU 이사회 입장과는 다른 의견의 제시
- 유럽의회 정파 간 공급망실사 범위를 '가치사슬(value chain)'로 확대하는 주장과 '공급망(supply chain)'으로 한정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, 초안은 '가치사슬' 용어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적시
- 인권침해 피해 보상과 관련, 초안은 기업이 피해 보상을 통해 공급망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. 다만, '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우'라는 조건을 추가
- 이번 초안은 경제통화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, 표결에 앞서 금융기관의 정의, 중소기업의 의무,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

⑨ 말레이시아, '삼림 공급망실사법'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

- 말레이시아는 EU의 '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'(이하 '삼림 공급망실사법')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
 - EU는 지난 12월 쇠고기, 코코아, 커피, 팜오일, 대두, 목재, 고무,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'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'을 확정
 -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(바이오 디젤은 제외)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

-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(목)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
 - 또한,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, '팜오일 생산국 위원회(CPOPC)'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
 -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는 팜오일 관련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팜오일 생산국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
 - 이에 대해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추가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, 파딜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
-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,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.4%인 147만톤을 EU에 수출. 이는 전년 대비 10.5% 감소한 것
- 전세계 3번째 팜오일 소비국인 EU는 삼림 황폐화를 이유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에서 팜오일 바이오디젤 수입을 점차 축소, 2030년에 금지하기로 결정, 삼림 공급망실사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EU의 팜오일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 바 있음

⑩ TSMC,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

-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(목)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
-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
 -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,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
 -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(애리조나)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,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
-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%에서 20%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'반도체 빅쓰리(인텔, 삼성 및 TSMC)'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

-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,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,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 를 연기.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
- 한편,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'정부의 지원 수준'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'독창성 기준(first of a kind facility)'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

① ECHA, 코발트 화합물 작업노출기준(OEL) 제안

-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(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, RAC), 코발트(cobalt) 및 무기 코발트(inorganic cobalt)에 대한 작업노출기준값(Occupational limit values, OELs)을 제안함.
- RAC 는 흡입성(inhalable fraction) 코발트 입자의 OEL은 8 시간 평균 $1 \mu\text{g}/\text{m}^3$, 그리고 호흡성(respirable fraction) 코발트 화합물은 $0.5 \mu\text{g Co}/\text{m}^3$ 의 OEL 을 제안함. RAC 는 생물학적 지침값(biological guidance value, BGV)으로 성별 소변 중 농도 값을 활용하여, 여성은 $2 \mu\text{g Co}/\text{L}$, 남성은 $0.7 \mu\text{g Co}/\text{L}$ 의 농도값을 권고하였으며, 피부 및 호흡기 감작성 분류표시도 제안함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\(클릭\)](#)

② P&G, ‘벤젠’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

- P&G(Procter & Gamble)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(Benzene)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함.
-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되었으며,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됨.
- P&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 Secret, Old Spice,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,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(합의금 지급)가 적용됨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\(클릭\)](#)

③ EUON, ‘나노물질의 분해성, 잔류성 및 안전 설계’에 관한 보고서 발표

- EUON(유럽나노물질관측소), ‘나노물질의 (생)분해성, 잔류성,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 (Study on (bio)degradation, persistence and safe by design of nanomaterials)*를 2022년 12월 발간하였음.

- 상기 보고서의 목표는 나노물질 및 관련 유기 코팅제의 (생)분해성, 잔류성에 대한 최신 기술, 현재 기술과의 격차 및 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, 나노물질 안전 설계(safe by design, SbD)에 관한 현 상황 분석 등임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\(클릭\)](#)